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 경위

- 발의일자: 2023. 6. 1.
- 발 의 자: 김한태 의원 외 4명
- 회부일자: 2023. 6. 7.(의안번호 제451호)
- 검토기간: 2023. 6. 7. ~ 6. 13.

2. 주요 내용

-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계획 수립 시, 국가환경종합 계획과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8조)
- 「지속가능발전법」의 폐지에 따라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5조)
-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 사항과 인용 조문, 띄어쓰기 등을 관련 기준에 맞도록 정비(안 제1조 외)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6조의2,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58조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나. 입법예고: 2023. 6. 8. ~ 6. 13.(접수된 의견 없음)

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검토 의견

가. 법적 근거 및 타당성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의 최근 제개정 사항을 두루 반영하여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시정하는 등 자치입법의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환경보전시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나. 조문별 주요 검토 사항

-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는 2002. 12. 30. 제정 이후 환경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하여 한 차례 부분적인 개정만 이루어졌을 뿐 20년 이상 누적된 상위법의 변경 사항을 조례 개정에서 수시로 반영하지 않은 까닭에 대부분의 조항에 걸쳐 수정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번 전부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환경보전의 기본이념,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규범 등을 적용하여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으며, 특히 안 제3조는 개정된 상위법의 관련 조항과 일치되도록 용어 및 표현을 다듬음으로써 국가적·국제적 환경보전시책 추진 방향과의 연계성을 확보한 점이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와 구청장, 사업자, 주민, 학교 등 환경보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 주체의 책무를 부과하였으며, 특히 안 제8조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와 환경부의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20년 주기의 환경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한 점 등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과 관련하여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구와 구민이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그러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 및 교육·홍보, 환경질 조사 등의 시책을 구에서 마련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안 제3조제4호에서 정한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됨.
- 현행 조례의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푸르고건강한서구21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협의회는 폐지된 「지속가능발전법」 제4조 및 제22조의 ‘의제21’⁴⁾과 관련된 조직이긴 하지만 현재 활동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법적 근거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그 대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근거한 서구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신설하여 구의 환경정책을 심의·자문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관계 법령에 부합되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 종합 의견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조문을 3분의 2 이상 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전부개정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조례 전반에 걸쳐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여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조문이 되도록 하였고, 관계 법령과의 연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구의 환경보전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효과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됨.

4) ‘의제21’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Agenda 21’의 번역어이며, 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이 행동계획의 실천과 확산을 위하여 민관협의체 형식으로 다양한 명칭의 협의회가 각 지자체마다 구성되었는데,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Agenda 21’이 ‘SDGs 2016-2030’이라는 새로운 행동계획으로 대체됨에 따라 협의회 명칭이 바뀌거나 담당 부서가 변경되었음.